

김기현-최재형 비공개 만남… 6대 혁신안 수용 ‘이목집중’

〈국민의힘 대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김 대표, 혁신위 활동경과 보고 받아 최 혁신위장, 혁신안 수용 의견 전해 “국민계 당 변화하는 모습 보여지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전 최재형 당 혁신위원장으로 부터 6대 혁신안을 보고 받았다. 지난 이준석 지도부 당시 출범한 혁신위가 마련한 혁신안을 김 대표가 수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최 혁신위원장과 비공개로 만나 그간 혁신위 활동 경과와 6대 혁신안을 보고 받았다. 지난해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 이준석 당시 대표가 ‘공천 개혁’ 등을 이유로 출범시킨 혁신위는 같은 해 12월 26일까지 활동했다.

혁신위가 마련한 6대 혁신안은 ▲공직후보자 부적격 심사 권한, 중앙윤리위원회로 이관 ▲공직후보자 추천 시 부적격 기준 강화·공직후보자 기초자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격평가(PPAT) 확대 ▲온라인 당원투표제·민생365위원회 도입 ▲상설·특별위원회 개선 ▲국회의원 정기평가제도 도입 ▲비례대표 공천 이원화(공관위 50%·전국위 50%) 및 여의도연구원 개선 등이다.

최 혁신위원장은 김 대표에게 6대 혁신안을 보고 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6월부터 연말까지 진행한 혁신위 활동 경과, 혁신위가 마련한 혁신안에 대해 새 당 지도부에 보고하는 자리였다. 새 지도부 구성 이후 당 대표에게 연락해 혁신안을 보고드리겠다고 했고, 오늘 시간을 내줘서 보고했다”고 했다.

이어 “(혁신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 보고 했고, 특별히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했다고 말하기 곤란하다”며 “혁신위는 당의 총선 승리, 국민에게 지지를 계속 받기 위해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며, 그 과정에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한 것들을 혁신안으로 마련했기에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 혁신위원장은 김기현 지도부가 혁신안을 수용했으면 하는 바람도 전했다. 혁신안 수용 불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최 혁신위원장은 ““저를 비롯한 혁신위원들은 당의 지속적 혁신과 개혁만이 총선 승리를 위해, 국민에게 지지받기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서 꼭 정비되어야 할 부분, 새로 마련해야 할 부분에 대해 혁신안을 작성한 것”이라며 “저희는 이 혁신안이 다 수용돼 우리 당이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최 혁신위원장은 “혁신안 주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양한 견해가 있기에 (새 지도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 다소 변형된 형식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재차 당 지도부가 혁신안을 수용해달라는 뜻도 애둘러 전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이재명 “모태펀드 예산 삭감, 납득 어려워… 필요시 추경이라도 해야”

〈더불어민주당 대표〉

SVB 대응 벤처·스타트업 간담회

이 대표, 강남 ‘팁스타운’ 방문 “경제는 심리… 신뢰 제고 역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벤처·스타트업 관계자를 만나 모태펀드 예산을 삭감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해서, 정부가 벤처와 스타트업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고 언제든지 든든히 응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모태펀드란 투자자가 개별 기업이 아닌 펀드에 출자해 투자위험을 줄이면서도 수익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모태펀드를 만들어 벤처캐피털이 운영하는 창업투자조합에 투자를 하고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에 배정된 2023년도 모태펀드 예산은 3135억원으로 지난해 5200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강남구 소재 팁스타운에서 미국 실리콘밸리 사태 대응 벤처·스타트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박태홍 기자

원과 비교해 약 40% 줄었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모태펀드 운영을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기침체에 벤처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최근 미국 스타트업의 자금줄이었던 실리콘밸리은행이 파산하면서, 국내 벤처·스타트업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스타트업들이 입주해있는 서울 강남 ‘팁스타운’을 찾아 “실리콘밸리은행이 갑작스럽게 파산하면서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매우 어려운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주로 담당하던 은행이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종사하는 관련 기업들이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벤처·스타트업들이 통계로 보니까 올해 1월 신규 벤처 투자액이 2579억 원인데, 작년 같은 기간 1조6400억에 비하면 80% 이상 급감한 수치라고 한다. 거의 가뭄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이 대표는 모태펀드 예산 삭감과 관련해 “올해 모태펀드 예산은 40% 삭감된 것이다. 4배로 늘려도 부족할 판인데 모태펀드 예산을 40% 삭감한 정부의 방향, 방침을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조금 어렵다”면서 “경제를 보는 시각이 어떤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상황이 점점 어려워져가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모태펀드 예산을 복귀하거나 늘려나가고,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방향을 진지하게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모태펀드 예산 삭감이 시장에 부정적인 신호로 읽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투자펀드 자금 편성 사례를 설명하며 정부는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손을 떼니 광야에 혼자 외롭게 서야 하나 생각할 수 있다. 스타트업이 가지는 위압감과 심리를 이해 못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경기도에서 투자펀드 자금을 편성한 일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신뢰도가 높았다. 정부가 함께 투자하는 신뢰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는 심리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미래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면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시장의 특성 중 하나가 불확실성이 커지면 모든 것을 회피하게 돼 있다. 안정이 될 때까지 불확실성을 제거해 신뢰를 제고하는 역할을 사실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尹 “한일관계, 대통령으로서 책무… 양국 공동이익 증진”

국무회의서 정상회담 입장 표명 굴욕·승일외교 비판 정면돌파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정상회담 등 일본 순방과 관련 야당과 시민단체가 ‘굴욕외교’·‘승일외교’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임 정부는 악화된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듯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고 밝힌 논란도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수상 말을 인용하며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하지만,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후, 존재 자체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관계의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 왔다.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며 “날로 치열해지는 미·중 전략경쟁,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 북핵 위협의 고도화 등 우리를 둘러싼 복합위기 속에서 한일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한일 양국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장 가깝게 교류해 온 숙명의 이웃 관계”라며 “한일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 때로는 이견이 생기더라도 한일 양국은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협력 방안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며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 제3자 변제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경제 당국 간 전략 대화를 비롯한 양국의 공동 이익을 논의하는 정부 간 협의체들을 조속히 복원하고, NSC 차원의 ‘한일 경제안보대화’도 곧 출범시킬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실과 일본 총리실 간의 경제안보대화는 핵심기술 협력과 공급망 등 주요 이슈에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일 경제계가 함께 조성하기로 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은 양국 미래세대의 상호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가교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에 따라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자원 무기화’ 공동 대응에 따른 에너지 안보 등 기여 ▲2050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변화대

응 ▲글로벌 수주시장 공동 진출 ▲한국산 제품 전반의 일본 시장 진출 확대 ▲양국 문화 교류에 따른 내수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안보협력, 한일 간 군사 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기시다 총리는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안보 공조가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일치했다”며 “전제조건 없이 선제적으로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완전히 정상화할 것을 선언해 한미일, 한일 군사정보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